

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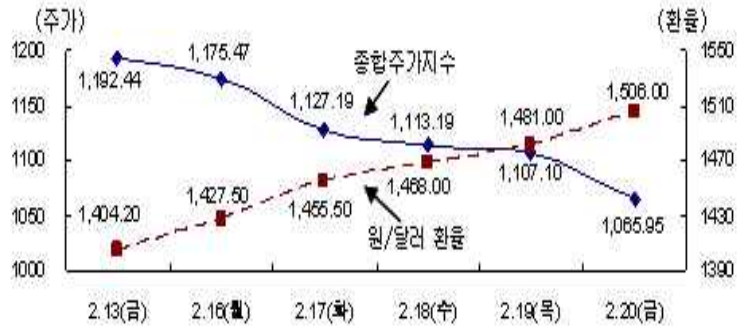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 역(逆)성장과 공공기관의 역할
-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와 再민영화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13~2.20)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역(逆)성장과 공공기관의 역할	1
-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와 재민영화(re-privatization)	
주간 경제 동향	16
□ 실물 부문 : 2008년 교역조건 악화	16
□ 금융 부문 : 금융시장 불안 재연	17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실물경제실 : 김 동 열 연구위원 (3669-4112, dykim@hri.co.kr)

Executive Summary

□ 逆성장과 공공기관의 역할: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와 再민영화

1. 서론 : 공공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지난 1988년 중앙과 지방 공기업 합계는 221 개였으나 2008 년의 공공기관은 672 개로 크게 증가했으며, 예산과 인력의 규모 및 비중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8월 11일(제1차)부터 2009년 1월 15일(5차)까지 모두 5회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향후 3~4년에 걸쳐 6개 공공기관에서 1만 9천명의 인력을 감축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작년 12월 30일에는 25개 대형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57조원(전년대비 9% 증가) 규모에 달하는 2009년도 투자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인력 감축'과 '투자 확대' 계획이 동시에 발표되고 있어서, 정부가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왼손으로는 일자리를 줄이고 오른 손으로는 일자리를 늘리려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역(逆)성장을 기록한 경제위기 시에 공공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고, 위극복을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알아보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제 3차 역(逆)성장의 시기에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할 새로운 역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제1차 및 제2차 역(逆)성장과 공공기관의 역할

공공기관과 국책금융기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경제위기 시에 완충지대와 지렛대(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가계와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가 소비와 투자를 망설이거나 그 여력이 소진되었을 때, 나머지 경제주체인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투자, 고용 창출을 통해 경기순환의 진폭을 최소화시키는 지렛대(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와 같은 逆성장과 경기침체에 꼭 필요하다.

(제1차('80년) 逆성장과 공공기관) 중화학공업의 과잉투자와 '73년 제1차 '79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초래된 첫 번째 逆성장(-1.5%)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공기업의 신설, 건축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 시중은행을 포함한 공기업의 민영화 등의 복합적인 정책을 구사한 바 있다.

특히, 해외개발공사('76), 토지개발공사('79), 석유개발공사('79) 등 공기업을 신설하여 수출의 감소와 석유 파동에 따른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했던 시도는 당시 정부 주도 경제개발계획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1.5%의 逆성장을 기록한 1980년 이후에는 4개 시중은행('81~'83)과 준설공사('81), 석유공사('81) 등을 민영화함으로써, 시장과 민간의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기조의 변화를 시사한다.

*참고: 국내총생산(GDP) 통계가 작성된 1953년 이후 1956년에도 -1.3%의 역성장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된 후 처음 대규모 경기침체를 기록한 1980년을 1차 역성장으로 규정.

(제2차('98년) 逆성장과 공공기관)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화에서 시작되어 외환 보유고의 부족으로 촉발된 '98년 외환위기와 제2차 逆성장(-6.9%)은 550억불(GDP 12.4%)의 구제 금융을 받는 댓가로 고금리와 긴축, 급격한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를 강요받았다.

포항제철,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 8개 대형 공기업의 민영화를 포함 모두 11개 기업(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의 지분을 매각하여 총 24조원의 매각수입을 거둬들여 부족한 재정수입을 (약14조원) 보완했고, 약52억불 규모의 외자를 유치하여 외환위기 극복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제3차 역(逆)성장 시대의 공공기관 선진화

미국의 부실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기침체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 경제도 부동산관련 대출의 급증과 금융기관의 외형경쟁, 취약한 외환시장, 높은 무역의존도 등이 맞물려 올해 역사상 3번째 逆성장(-2%대)과 대규모(100만명) 실업이 예상되고 있다.

작은 정부를 정책기조로 내세운 새 정부는 제3차 逆성장이라는 최악의 정책환경 하에서도 6개월 동안 5차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계속 발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민영화 38개, 통폐합 43개, 경영효율화 69개, 未지정 출자회사 매각 111개 등이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된 5차례의 공기업 민영화와 달리, 새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가 지니는 3가지 차별화 포인트는 (1)산업은행, 기업은행, 관련 자회사를 포함하는 대형 금융공기업의 민영화 (2)대우조선, 쌍용건설, 현대건설, 우리금융지주 등 14개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재(再)민영화(re-privatization) (3)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던 130개 未지정 출자회사를 매각(111개) 또는 통폐합(19개)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3가지 포인트 외에 역사상 최악의 정책추진 환경과 최대 규모의 추진계획이라는 점에서도 과거의 공기업 민영화와 차별화된다.

4. 공공기관의 새로운 역할 : 일자리 나누기와 再민영화(re-privatization)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종합적으로 보면 매우 충실하고 의욕적이며, 지속적인 실천의지가 뒷받침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제3차 逆성장이라는 최악의 정책 환경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998년 제2차 逆성장 시기에는 외환위기가 동남아에 국한되었으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DR(주식예탁증서)을 발행하여 외자를 유치하고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었지만, 현재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제3차 逆성장 시기에는 공기업의 해외매각과 이를 통한 민영화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최악의 경제위기 하에서 매우 의욕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목표를 성공리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아래 표와 같이 일자리 나누기 (job sharing)와 재 (再)민영화(re-privatization)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순위	목표	방법	내용
1순위	일자리 나누기 (job sharing)	노사합의에 기초한 고통분담과 경영효율화	·근로시간 단축, 인건비 절감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고용 유지, 신규 채용
2순위	공공기관 투자 활성화	25개 대형 공공기관 투자규모 확대	·25개 대형 공공기관을 활용 5조원 규모(9조 증가)의 투자를 조기 집행
3순위	재민영화 (re-privatization)	14개 공적자금 투입기업 재매각에 집중	·대우조선, 대우증권, 현대건설 등 공적자금 투입 14개 기업 재(再)민영화

1순위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와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다. 이를 위한 노사간의 양보와 타협, 공동체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 대졸 초임의 인하와 인건비 동결, 불요불급한 예산 감축 등으로 확보한 재원을 통해 신규 직원과 인턴, 파트타이머를 채용하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도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고용빙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이다.

2순위는 25개 대형 공공기관을 활용한 **공공기관 투자활성화(re-vitalizing public investment)**다.

정부가 작년 12월30일 발표한 25개 대형 공공기관을 활용한 5조원 규모의 투자활성화(전년대비 9조원 증가) 계획을 조기에 집행하여, 경기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하는 작업이 올해 상반기에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3순위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개 기업의 매각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재민영화(re-privatization)**다.

예를 들면, 대우조선, 대우증권, 현대건설, 쌍용건설, 우리금융지주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우량기업으로 변신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 (再)민영화 (re-privatization)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일자리를 고급화하고 내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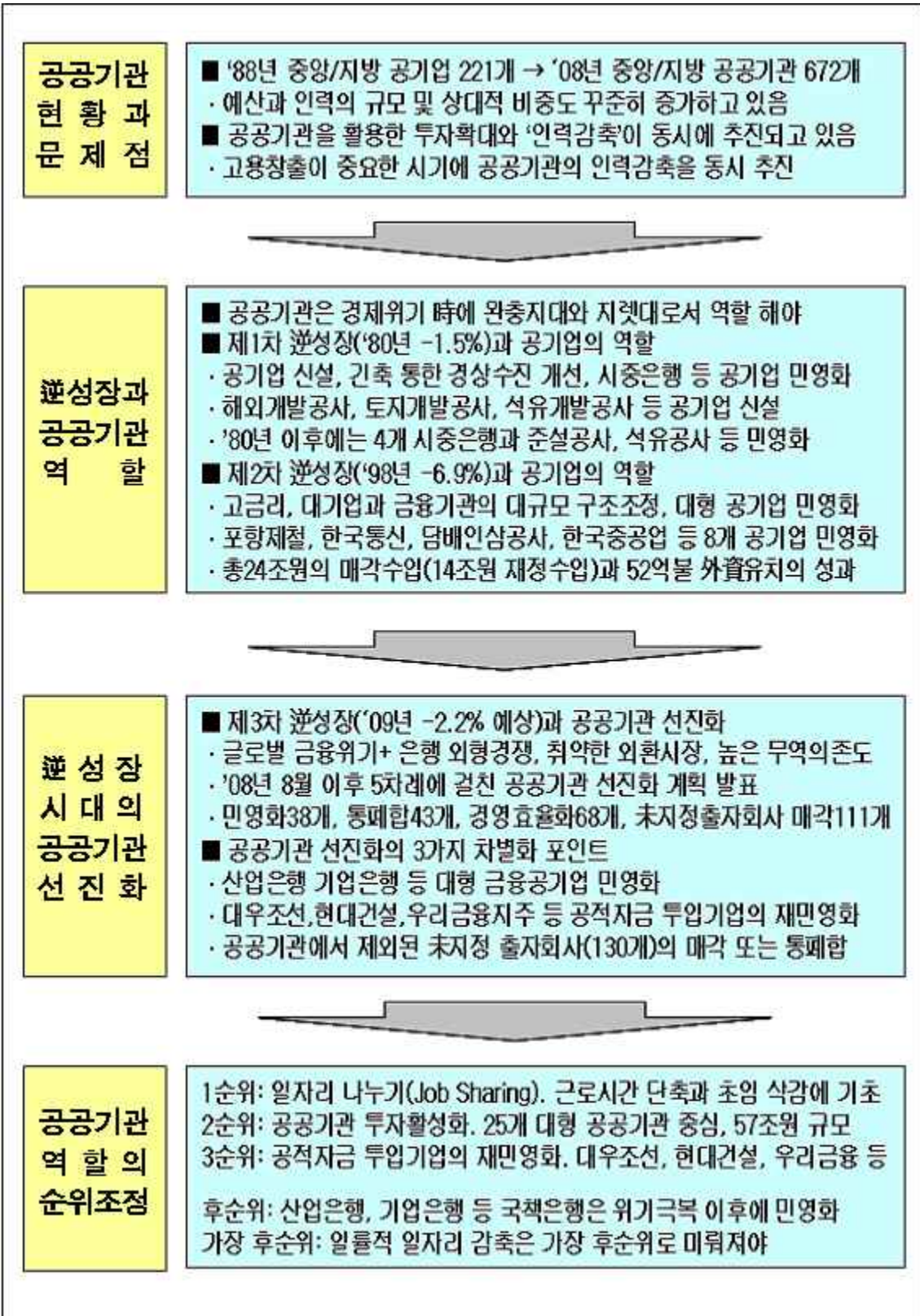
후순위는 **금융공기업의 매각**이다. 예를 들면,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같은 대형 금융공기업의 매각은 이들 국책은행을 활용한 경제위기 극복이 마무리된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 그리고, 민영화를 할 경우에도 매각 후 상장 이 아니라 상장 후 매각 으로 순서를 바꾸고, 민영화를 뒤로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적극 활용하여, 연기금과 사모펀드(PEF) 등 국내 대형투자자들이 민영화에 참여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가장 후순위는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화를 통한 조직혁신**이다.

예를 들면, 정원 10% 일률 감축과 같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계획은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가 없었다면 실천해볼만한 정책이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역(逆)성장과 공공기관의 역할: 일자리 나누기와 再민영화 >



1. 서론 : 공공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 (연구 배경) 5차에 걸쳐 ‘공기업 선진화’¹⁾ 정책이 발표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과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경제위기와 공공기관의 새로운 역할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5차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 : 작년8월11일(제1차)부터 ‘09년1월15일(5차)까지 5회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향후 3~4년에 걸쳐 69개 공공기관에서 1만9천명을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위와 같은 선진화 계획과 별도로 작년12월30일에는 25개 대형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57조원 규모에 달하는 2009년도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인력감축과 투자확대 동시 발표 :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인력감축과 투자확대 계획이 동시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의 인력을 감축하는 한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모순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과거 경제위기 시에 공공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고,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새로운 방향과 역할을 제시해보고자 함
- (공공기관 현황과 문제점)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절대적, 상대적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구조조정과 선진화의 필요성은 엄존함

< 공공기관의 20년 전후 비교 >

1988년 현황		2008년 현황	
중앙 공기업	102개	공공기관	305개
-정부기업	3개	-시장형 공기업	6개
-정부투자기관	26개	-준시장형 공기업	18개
-정부출자기관	6개	-준정부기관	77개
-투자기관 출자회사	67개	-기타공공기관	204개
지방 공기업	119개	지방 공기업*	367개
공기업 합계	221개	공공기관 합계	672개

주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2007.4)에 따라 정부기업, 투자기관, 출자기관 등의 분류가 없어짐.
지방공기업은 2007년6월말 현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료.

1)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민영화’가 최선이지만, 새 정부는 ‘민영화’ 이외에도 경영혁신과 효율화, 기능조정과 통폐합 등 다양한 차선택들이 있음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선진화’로 정책을 차별화함. 촛불집회 이후 ‘민영화’에 집중되던 비판과 반대 여론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었음.

- **20년간 공공기관 꾸준히 증가** : 지난 1988년부터 2008년까지 20년 동안 공기업(공공기관)의 숫자는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지방공기업과 準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특히 시급함을 알 수 있음
 - 2002년 말부터 2008년 6월 현재까지 5년 동안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숫자는 253개에서 305개로 늘어났으며, 인력도 19.1만 명에서 25.9만 명으로, 예산도 206조원에서 338조원으로 늘어남
- **외형 증가와 수익성 악화** : 외형의 증가에 비해 수익성은 악화되었는데,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2003년 말 31.1조원에서 2007년 말 17.4조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2007년 말 결산에서 89개 공공기관이 적자를 기록함

< 공공기관의 규모 및 경영 현황 추이 >

	기관 수 (개)	인력 (만 명)	예산 (조 원)	당기순이익 (조 원)
2002년 말	253	19.1	206	31.1*
2008년 6월	305	25.9	338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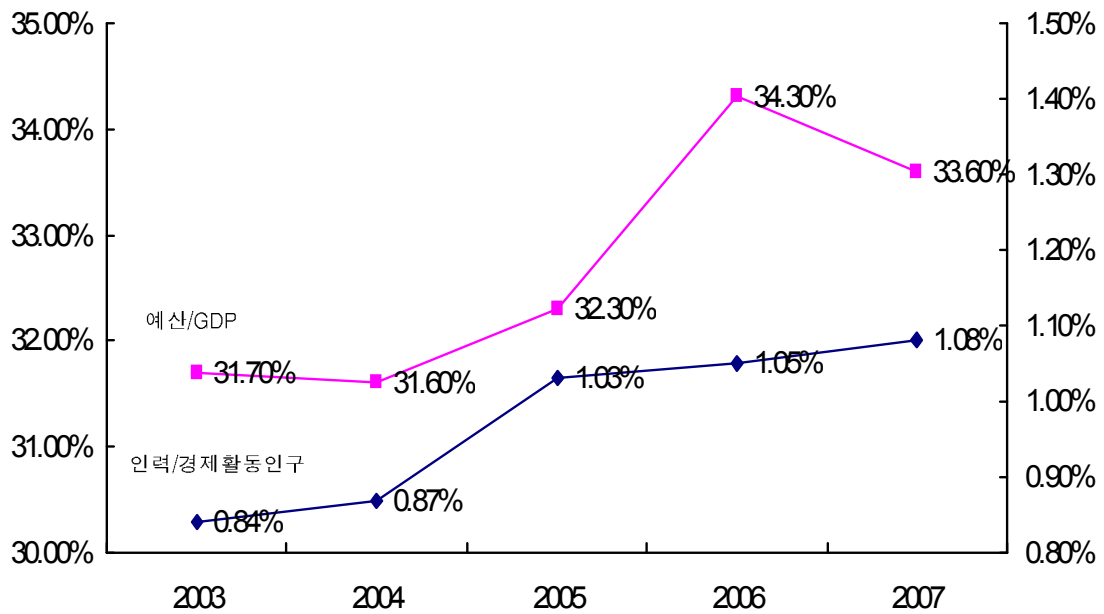
주 : 당기순이익은 각각 2003년말과 2007년말 자료 (한국경제신문, '08년6월19일자, 6면).

- **낮은 생산성, 높은 인건비** : 최근 들어서도, 공공기관의 낮은 생산성과 과도한 경비 지출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됨
 - 대형 35개²⁾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02년 이후 노동생산성보다 더 높게 증가
 - * '02~'07년 인당 부가가치는 연평균 1.8% 증가, 인당 인건비는 6.6% 증가
 - 사내 근로복지 기금의 과다 출연, 학자금과 주택자금의 무상지원 등도 지적

2) 공기업 24개 + 산은, 수은, 기은 등 금융공기업 8개 + 과거 정부투자기관 3개 (코트라, 농유통, 농촌공사) 등 35개 대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조세연구원(임희철, '08.3) 자료.

- 예산과 인력의 비중 증가 :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 또한 지난 5년간('02~'07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의 예산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31.7%에서 2007년 33.6%로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또한, 공공기관의 인력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3년 0.84%에서 2007년 1.08%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인력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



2. 제1차 및 제2차 역(逆)성장³⁾과 공공기관의 역할

○ (2차례 역성장과 공공기관) 과거에 발생했던 2차례 대규모 역성장(80년 석유위기, '98년 외환위기)이 발생한 원인과 배경이 달랐던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공공기관의 역할도 달랐음

- (1) 제1차('80년) 역성장과 공기업: 중화학공업 과잉투자와 '73년 1차, '79년 2차 석유파동으로 초래된 역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공기업의 신설, 긴축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과 7개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빠르게 위기를 극복
 - 해외개발공사('76), 토지개발공사('79), 석유개발공사('79) 등 공기업을 신설하여 대응했으며, '80년부터는 4개 시중은행을 비롯한 6개 공기업 민영화로 민간부문의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함

< 2차례 역(逆)성장과 V字 회복, 그리고 제3차 역(逆)성장 >

구분	제1차('80년) 역성장	제2차('98년) 역성장	제3차('09년) 역성장
(-) 성장	· GDP -1.5% 성장 ('79년 6.8%, '81년 6.2%)	· GDP -6.9% 성장 ('97년 4.7%, '99년 9.5%)	· GDP -2.2% (전망*) ('08년 2.5%, 2010년 ?%)
원인	· 1차('73), 2차('79) 석유파동 · 중화학공업 과잉투자 · 교역조건 악화와 경상수지 적자 누적	· 대기업 과잉/중복 투자 · 금융기관 부실화 · 단기외채 급증, 외환부족	· 미국발 금융위기 · 부동산/가계 대출증가 · 금융권 외형경쟁 · 높은 무역의존도
대응	· 긴축, 경상수지 개선 · 대외지불능력 제고 · 효율성과 경쟁력 회복 · 공기업 신설 + 민영화	· 고금리, 신용 경색 · 금융/대기업 구조조정 ·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 · 공기업 민영화+외자유치	· 감세와 규제완화 · 금리 인하(5.25→2.5%) · 재정지출 확대 · 공공기관 선진화
外換	· IMF 긴급 구제금융 (8.4억불, GDP 1.3%)	· IMF 긴급 구제금융 (550억불, GDP 12.4%)	· 韓美 통화스왑 (300억불, GDP 약3%)
공공 기관	· 원유 확보와 수출확대를 위해 공기업 신설 - 한국해외개발공사('76) - 한국토지개발공사('79) - 한국석유개발공사('79) · '80년 이후 민영화 추진 - 한일/제일/신탁/조흥銀行 - 대한석유공사, 준설공사	· 4대 개혁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민영화와 외자유치 로 외환위기에 대응 - 포철, 한국통신 등 8개 공기업 67개 자회사 매각 - 매각수입 24조원(재정수입 약14조, 외자 52억불)	· 5차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 -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 - 공공기관 투자활성화 - 대우조선, 현대건설 등 14개 공적자금 투입기업 재민영화

자료 : 한국은행(ecos.bok.or.kr), 공기업백서(1988), 공공개혁백서(2002), 이삼호(1999) 등 참고.

주 : 2009년 성장률(-2.2%)은 현대경제연구원의 '09년2월11일자 수정 전망치임.

3) 국내총생산(GDP) 통계가 작성된 1953년 이후 1956년에도 -1.3%의 역성장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경제개발과 성장이 시작된 1962년 이후 처음 대규모 경기침체와 역성장을 기록한 1980년을 제1차 역성장으로 규정함.

- (2) 제2차('98년) 역(逆)성장과 공기업 :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화에서 시작되어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촉발된 '98년 외환위기는 550억불(GDP 12.4%)의 구제금융 댓가로 고금리와 긴축, 급격한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를 강요받음
-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대 부문(기업, 금융, 노동, 공공)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했으며, 공기업 민영화도 계획 대비 충실하게 추진됨

< 제2차('98년) 역(逆)성장과 공기업 민영화 >

대 상 기 업	당초 계획 ('98년 공기업 민영화 계획)	추진 실적			
		매 각 방 법	매각수익 (억원)	완료 시점	인수업체
국정교과서	▪3년간 현행 가격·공급량 유지 조건 매각	▪경쟁입찰(86.5%)	460	'98.11	대한교과서
종합기술 금 용	▪정부지분, 자사주를 경쟁입찰 매각	▪경쟁입찰(10.2%) ▪증시매각(2.0%)	116	'99.1	(주) 미래와 사람
대한송유관	▪한국송유관(주)와 통합, '00년 실수요자에 매각	▪「투자계약서」에 의해 기존주주 인수(36.8%)	1,669	'00.4	기존 주주 (정유 4사)
포항제철	▪정부산은 지분(26.7%)을 1인당 3% 한도로 매각	▪해외DR(18.5%, 3회) ▪자사주(8.2%, 3회)	27,801	'00.10	소유 분산
한국종합 화 학	▪자산매각 후 청산. 남해화학은 농협에 매각	▪3회 유찰, 적자로 조기청산('01.12)	-	'00.11	(남해화학 →농협)
한국중공업	▪지분매각, 완전민영화, 우리사주제 도입	▪공모(24%) ▪경쟁입찰(36%)	4,290	'00.12	두산 그룹
한국통신 (K T)	▪신주10% 전략적 제휴 ▪직상장, 해외공모, 국내매각	▪해외매각(44.1%, 3회) ▪국내매각(29.5%, 2회)	126,999	'02.5	소유 분산
담배인삼 (K T & G)	▪'00년까지 정부 및 은행 지분 완전 매각	▪해외(39.7%, 3회) ▪국내(41.9%, 3회)	30,513	'02.10	소유 분산
한국전력	▪발전과 송배전 분리, 발전·배전 민영화 ▪송전은 공기업 유지	▪6개 발전 자회사 분리완료('01.4). ▪노사정 공동연구단 연구('03.9~'04.5) 결과에 따라 노사정위 <u>배전부문 분할 중단권고('04.6)</u>			
한국가스 공 사	▪도입/도매부문 3개사 분할, 2개사 매각	▪구조개편법 국회 제출('01.11)했으나 회기만료 폐기 ▪노사정 공동 해외사례 조사('03.6~10) ▪노사정위 협의안 국회제출('06.10)→ 회기만료 폐기			
지역난방 공 사	▪부천·안양사업소 분라 매각 후 '01년까지 51% 이상 지분매각	▪안양·부천사업소 LG에 매각 ▪주민 반발·소송으로 상장지연, 소송종결('04.1.12) ▪'07.9월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u>상장 추진 중.</u>			

자료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 공기업 민영화로 제2차('98년)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98년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대형 공기업을 국내외에 매각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도 기여함
- 포철,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 대형 공기업의 소유분산으로 매각수입을 극대화하진 못했으나, 24조원의 매각수입으로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완(약 14조원)하였고, 52억불 규모의 外資를 유치하는 등 위기극복에도 기여했음

< '98년 이후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연도별 매각수입 >

(단위 : 억 원)

연도별	대상 공기업	재정 수입*	기타 수입*	계
1998년	국정교과서	213	247	460
	포항제철	2,181	1,891	4,072
	한국전력	-	1,136	1,136
	주회사	-	981	981
	소계	2,394	4,255	6,649
1999년	종합기술금융	93	23	116
	한국전력	9,045	5,257	14,302
	한국통신	13,391	15,623	29,014
	포항제철	-	15,277	15,277
	담배인삼공사	7,982	1,593	9,575
	가스공사	1,976	7,904	9,880
	주회사	-	8,883	8,883
소계	32,487	54,560	87,047	
2000년	대한송유관	197	-	197
	포항제철	-	8,452	8,452
	한국전력	-	4,362	4,362
	지역난방공사	-	1,623	1,623
	한국중공업	-	1,543	1,543
	담배인삼공사	-	4,148	4,148
	주회사	-	4,811	4,811
소계	197	24,939	25,136	
2001년	한국중공업	-	3,946	3,946
	대한송유관	1,472	-	1,472
	한국통신	30,956	-	30,956
	담배인삼공사	4,611	2,007	6,618
	주회사	-	4,075	4,075
	소계	37,039	10,028	47,067
2002년	한국통신	67,029	-	67,029
	담배인삼공사	-	10,172	10,172
	주회사	-	796	796
	소계	67,029	10,968	77,997
총계		139,146	104,750	243,896

자료 : 기획예산처, 『공공개혁백서』, 2002, p.111.

주 : 매각수입 중 국고로 납입된 금액은 재정 수입으로, 나머지는 기타 수입으로 분류됨.

3. 제3차 역(逆)성장 시대의 공공기관 선진화

○ (과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1960년대 후반부터 민간기업 육성, 시장경제 유도 등을 명분으로 본격적인 민영화가 시작되었으며, 과거 정부에서 모두 5차례의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었음

- 정권 교체와 민영화 : 1968년의 제1차 민영화를 제외한 4차례의 민영화는 모두 정권 교체기에 추진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정권 초기에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중반 이후에 유야무야되는 '정치적 순환'의 패턴을 보여 왔음
- '98년 외환위기 하에서 추진된 제5차 민영화가 가장 성공적이었음

< 과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

구 분	추진실적	주요 목적 및 평가
1차 민영화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 공기업 민영화 완료 · 한국기계, 대한통운, 대한해운, 대한조선, 인천중공업, 대한철광, 대한항공('68), 한국광업제련('70), 대한염업('71), 상업은행 한국수산개발('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육성 → 시장경제 유도 ▪ 경쟁 입찰과 현물 출자 ▪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
2차 민영화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공기업 민영화 완료 · 대한재보험('78), 대한석유공사('81), 대한조선공사('81) · 한일은행('81),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82), 조흥은행('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율화, 민간주도 경제 육성 ▪ 지분 분산에 그친 경우 많아 ▪ 정부간여 지속으로 금융자율화 목적 달성에는 한계
3차 민영화 ('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거래소 민영화('87) ▪ 한전, 포철의 정부지분 국민주 방식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배 형평성 도모(국민주 도입) ▪ 실질적 민영화로 보기 곤란
4차 민영화 ('93~'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중석, 자회사 등 7개 매각 ▪ 22개 기업의 일부 지분 매각 ※ 국민은행('95), 주택은행('97) 민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적 민영화 목표했으나, (58개 공기업 경영권 이양 목표) * 통신, 전력 등 기간산업은 제외 ▪ 일부 지분매각에 그침 (경제력 집중, 이해관계자 반발 등)
5차 민영화 ('98~'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공기업 민영화 (11개 계획) ▪ 67개 자회사 매각 (77개 계획) ▪ 기능, 조직·인력 구조조정 병행 (자회사 포함 13만1천 명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축소, 재정수입 확충, 산업·경영 효율화 ▪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 다만, 한전 등 網산업의 민영화 논란

- 민영화 후 경영성과 크게 개선 : '98년 이후 민영화된 한국종합기술금융(현 KTB증권),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포항제철, 대한송유관공사 등의 경영 성과가 크게 개선⁴⁾됨
- 2000년 민영화된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의 경우 흑자를 내는 우량기업으로 변신했을 뿐만 아니라, 시가총액도 '09년2월10일 현재 17.7배 증가
- 포항제철의 경우에도 순익은 3.8배, 시가총액은 4.5배 증가했으며, 한국종합기술금융과 대한송유관공사도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전환함

< 민영화 기업의 재무적 성과 >

(단위 : 억 원)

구 분	당기순이익 (민영화 당시 → '07년 말)	시가총액 (민영화 당시 → '09.2.10 현재)
한국중공업	△249('00년) → 2,986('07년)	4,335('00.12.12) → 76,825('09.2.10)
종합기술금융	△1,282('98년) → 332('07년)	815('98.12.28) → 1,963('09.2.10)
포항제철	9,555('00년) → 36,794('07년)	76,606('00.10.4) → 343,516('09.2.10)
대한송유관	△286('00년) → 209('07년)	非상장기업

자료 : 기획예산처(2002), 한국거래소(www.krx.co.kr) 홈페이지, 각사 홈페이지.

○ (세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정책기조의 일환으로서 공공기관 선진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제3차 **逆성장**이라는 최악의 정책 환경을 맞이함

- 공공기관 선진화의 주요 내용: 지금까지 모두 5차례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민영화 38개, 통폐합 43개, 未지정 출자회사⁵⁾의 매각 111개, 경영효율화 69개 등 다양한 내용과 방대한 계획으로 구성됨
- 산업은행 · 기업은행 · 대우조선 · 쌍용건설 등의 민영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 출자회사 대폭 정리 등이 핵심 내용

4)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공기업 민영화의 성과분석: 개별기업관점', 2007)와 김현숙(2007)의 연구에 따르면, '98년 이후 민영화된 7개 공기업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이윤, 성장성, 생산성이 모두 민영화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민영화로 인해 고용과 부채비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함.

5)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5가지 유형의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출자회사나 재출자회사.

<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주요 내용 (요약) >

선진화 계획	민영화	통합	폐지	기능조정	경쟁도입	효율화	계
■ 1차 선진화 ('08. 8.11) (산은, 기은, 대우조선 민영화)	27	2→1	-	12	-	-	41
■ 2차 선진화 ('08. 8.26) (기능 중복 공공기관 통폐합)	1	29→13	3	7	-	-	40
■ 3차 선진화 ('08.10.10) (한전 및 자회사 선진화)	10	7→3	2	1	2	8	30
■ 4차 선진화 ('08.12.22) (인력 감축 등 경영효율화)	-	-	-	-	-	69	69
■ 5차 선진화 ('09. 1.15) (未지정 출자회사 대폭 정리)	111	2→0	17				130
계	149	40→17	22	20	2	77	238*

주 : 합계가 다른 것은 여러 계획이 중복된 기관을 하나로 계산했기 때문.

- '공공기관 선진화'의 3가지 차별화 포인트 : 새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과거 정부의 5차례 공기업 민영화와 내용상 차별화되는 3가지
 - (1)산업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자회사를 포함한 대형 금융공기업의 민영화
 - (2)대우조선, 대우증권, 쌍용건설, 쌍용양회, 현대건설, 하이닉스, 우리금융지주 등 14개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再민영화(re-privatization)
 - (3)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던 130개 未지정 출자회사를 매각 또는 통폐합
- 공공기관 선진화는 최악의 정책추진 환경과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도 차별화됨

< 공공기관 선진화의 차별화 포인트 >

구분	공공기관 선진화의 특징
환경	◇글로벌 금융위기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최악의 정책추진 환경
목표	◇대규모 선진화 계획 (공공기관 38개 민영화, 43개 통폐합/ 未지정 출자회사 130개 매각·정리)
주요내용	◇산은, 기은 등 7개 대형 금융공기업의 민영화 ◇대우조선,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 14개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再민영화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던 130개 未지정 출자회사의 매각(111개)·정리(19개)

4. 공공기관의 새로운 역할 :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와 再민영화

○ (선진화 계획의 평가) 5차례에 걸쳐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종합적으로 보면 매우 충실하고 의욕적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제3차 逆성장이라는 장애물에 직면

- 글로벌 금융위기가 선진화의 장애물: '선진화'의 목표가 높고, 내용도 충실하지만, 최악의 경제위기 하에서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고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예를 들면, 과거 '98년 제2차 逆성장 하에서는 해외DR(주식예탁증서) 발행을 통한 매각과 민영화가 가능했지만, 현재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제3차 逆성장 하에서는 '해외매각'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공공기관 선진화의 우선순위 재조정)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의욕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투자활성화, 再민영화에 집중하도록 재조정

< 공공기관 선진화의 우선순위 조정 >

순위	목표	방법	내용
1순위	일자리 나누기 (job sharing)	노사합의에 기초한 고통분담과 경영효율화	· 근로시간 단축, 인건비 절감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고용 유지, 신규 채용
2순위	공공기관 투자 활성화	25개 대형 공공기관 투자규모 확대	· 25개 대형 공공기관을 활용 5조원 규모(9조 증가)의 투자를 조기 집행
3순위	再민영화 (re-privatization)	14개 공적자금 투입기업 재매각에 집중	· 대우조선, 대우증권, 현대건설 등 공적자금 투입 14개 기업 재(再)민영화

- (1순위) 노사합의에 기초한 고통분담과 경영효율화(re-inventing public management)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 근로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동결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경비를 줄여서 확보한 재원으로, 신규 직원과 인턴, 파트타이머를 채용하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도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불황기에 필요한 대책임
 - 例 : 1990년대 초 獨 폭스바겐(Volkswagen),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로 대량해고 예방

< 공공기관의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추진 사례 >

공공기관	재원 조달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내용
주택금융공사	- 대졸 초임 30% 인하	- 인턴 20명 채용. 이중 16명 정규직 채용 예정
자산관리공사	- 대졸 초임 25% 인하 - 인건비 동결	- 신입사원 채용 확대(30명 → 40명) - 인턴 채용 40명 추가
인천국제공항	- 대졸 초임 30% 인하 - 임금 동결, 무급 휴가	- 신규채용 2배로 확대
수출보험공사	- 간부직원 성과급 반납	- 인턴 채용 확대 (20명 → 55명)
한국전력	- 대졸 초임 인하	- 신규채용 확대 (200~300명) - 인턴 채용 확대 (1,970명)
한국수력원자력	- 대졸 초임 인하	- 신규채용 확대 (신입 150명, 인턴 390명)
주택공사	- 사내복지기금 40억	- 미취업 주부 1천명 채용
농어촌공사	- 간부직 임금 30% 반납 - 일반직 임금 5% 반납	- 신규채용 확대 (정규직 150, 비정규직 240) - 인턴 352명 채용
한국마사회	- 임직원 급여 동결 - 성과급 반납	- 인턴 200명, 아르바이트 1,000명 채용

- 정부의 플러스 인센티브⁶⁾와 노사합의에 기초하여 근로시간 단축, 급여 동결, 대졸 초임 인하⁷⁾ 등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가 자연스럽게 추진됨으로써, 생산성 하락과 '경영효율화 지연' 등에 따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6) 상반기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이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기 위해 기존 직원의 급여를 인하할 경우, 임금절감액의 50%를 손비로 인정하여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금리를 우대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비율도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임금의 2/3에서 3/4으로 인상됨.
7) 공공기관의 대졸초임 평균은 2,900만원으로 1,0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초임 평균 2,822만원과 비슷하지만, 일부 금융 공기업의 경우 대졸 초임이 3,800만원~3,900만원에 달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2순위) 25개 대형 공공기관의 투자를 9조원 이상 늘리는 등 **공공기관 투자활성화(re-vitalizing public investment)**

· 정부가 작년12월30일 발표한 25개 대형 공공기관을 활용한 57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작년대비 9조원 증가)을 조기에 집행하여, 경기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일이 상반기에 우선 추진되어야 함

- (3순위) 14개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재매각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재(再)민영화(re-privatizing public enterprises)**

· 예를 들면, 대우조선, 대우증권, 대우인터내셔널, 현대건설, 쌍용건설, 우리금융지주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량기업의 재민영화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실천함으로써, 일자리를 고급화하고 내실화하는 것도 중요함

< 14개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주요 내용 >

회사	공적자금 투입	주요 주주 및 지분 구성	시가 총액
대우조선해양	1999년 8월	산업은행31.26%, 캬코(kamco)19.11%	48,800억원
대우증권	1999년 8월	산업은행39.1%	30,000억원
대우일렉트로닉스	1999년 8월	캬코(kamco), 우리은행 등 채권단 97.5%	非상장
대우인터내셔널	1999년 8월	캬코(kamco)35.53%, 수은11.58%, 산은5.31%	23,747억원
현대건설	2001년 3월	산은14.68%, 우리14.37%, 외환12.41%, 국민5.07%	63,941억원
현대종합상사	2003년 9월	우리22.7%, 산은22.53%, 외환14.14%, 신보10.38%, 농협10.02%	3,851억원
하이닉스	2001년10월	외환8.21%, 우리8.02%, 산은7.06%, 신한6.09%	48,115억원
쌍용양회	2001년10월	산은14.86, 신한13.39, 서울보증11.33, 캬코10.05	4,614억원
쌍용건설	1999년 3월	캬코(kamco)38.75%, 우리사주16.27%	2,161억원
팬택	2007년 4월	산은16.8, 새마을15.4, 하나10.8, 우리9.8, 신보8.9	非상장
팬택 앤 큐리텔	2007년 4월	새마을금고24.4%, 산은15%, 신한12.6%, 우리6.8%	非상장
한국항공우주산업	2001년 2월	산업은행27.9%, 두산20.5, 삼성20.5, 현대차20.5	非상장
서울보증보험	1998년11월	예금보험공사 93.85%	非상장
우리금융지주	2001년 3월	예금보험공사 72.97%	58,839억원

주 : 시가 총액은 2009년 2월13일 기준. 캬코(kamco)는 '자산관리공사'.

- (기타 후순위) 시장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산업은행과 같은 대형 금융 공기업의 매각과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거나, 그리고 일률적(例, 10%) 인력감축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등의 계획은 후순위로 미루어져야 함
 -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대형 공기업의 매각은 국책은행을 활용한 위기극복이 마무리된 이후에 순차적/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예를 들면, 민영화를 할 경우에도 '매각 후 상장'이 아니라, 그 반대로 먼저 증시에 '상장 후 공매'(public offering)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기금과 PEF(사모펀드) 등 국내 대형투자자로 하여금 민영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
 - 작년12월22일 발표된 제4차 선진화 계획의 핵심 내용인 69개 주요 공공기관에서 19,400 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계획은 가장 후순위로 미뤄져야 함
 - 충분한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인력의 구조조정과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시기를 뒤로 미룰 필요가 있음

김동열 연구위원 (dykim@hri.co.kr, 3669-4112)

< 참고 1 > 국내외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사례

기업체	방법	주요 내용
유한킴벌리	- 교대 근무제도 변경 - 생산성 향상으로 인건비 인상을 커버.	- 3조 2교대를 4조2교대로 변경 - 경기침체로 인한 인력감축 대신, 교대근무조를 늘려서 일자리를 나눔. - '쉬는 조'는 학습/훈련으로 생산성 향상
가온전선	- 근무형태 전환	- 제조라인을 '교대근무' 방식으로 전환
하이닉스	- 배치 전환	- 문을 닫게 된 3개 공장의 1천명을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
현대중공업	- 임원 성과급 반납	-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
하나투어	- 근무일수 단축 (주3일~4일 근무)	- 정년 65세까지 연장
英 JCB (건설장비업체)	- 주당50파운드 임금삭감 - 주 4일 근무제 실시	- 350명 해고 방지
美 FEDEX (물류업체)	- 급여 삭감 (임원 20%, 간부 8~10%, 일반직 5%) - 퇴직연금 회사분 1년 중단	- 고용 유지
佛 크레디리요네 (금융기관)	- 직원급여 25% 반납	- 고용 유지
日 이스즈 (자동차업체)	- 정규직 급여 삭감 (임원 30%, 일반직 10%)	- 고용 유지

< 참고 자료 >

- 감사원(2002), 『공기업감사백서』
 경제기획원(1988), 『공기업백서』
 기획예산처(2002), 『공공개혁백서』
 박채기(2000), '김대중 정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광주전남행정학회보] 제7호.
 김준기,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정책의 부재?',
 [한국정책학회보] 8(1), 1999
 김동열, '공기업 민영화: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
 [VIP REPORT 2008.7.8], 현대경제연구원
 김현숙(2007),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재정논집] 제22집 제1호, 2007년8월
 삼성경제연구소(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송대회(1998), '공기업개혁의 중간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공기업학회
 이삼호(1999), '1980년과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
 최병선(1991), '민영화의 정치경제', 『한국행정학회보』, 제25권 제2호
 최종원(1994), '공기업민영화의 정책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제16권 제1호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www.alio.g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2008년 교역조건 악화

○ 원유수입단가의 상승으로 수입단가(전년대비 21.1%)가 수출단가(전년대비 4.4%)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08년 교역조건이 악화됨

- 수입단가는 자본재 품목이 내렸으나 원유수입단가 등 원자재와 곡물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21.1% 상승함
- 수출단가는 석유제품이 상승하여 전년대비 4.4%을 기록함
- 일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나타내는 순상품교역지수([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100)는 전년대비 13.8% 하락
- 총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나타내는 소득교역조건([순상품교역조건지수×수출물량지수]/100)는 전년대비 8.3% 하락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7	2008					2009 1월	
			연간	1/4	2/4	3/4	4/4		
경기	경제성장률	5.0	28(-35)	58(0.8)	48(0.8)	38(0.5)	-34(-5.6)	-	
	수요	소비재판매	5.3	0.5	3.9	2.5	1.1	-5.5	-
		설비투자주계	8.6	-2.9	-0.9	0.1	6.1	-16.8	-
		건설수주	19.3	-9.1	-3.9	-6.1	-22.8	-3.7	-
	수출	14.1	13.6	17.4	23.1	27.0	-9.9	-33.8	
	공급	광공업생산	6.8	3.3	10.6	8.6	5.6	-11.5	-
		취업자수(만명)	2,343	2,358	2,305	2,387	2,373	2,367	-
		실업률	3.2	3.2	3.4	3.1	3.0	3.1	-
수입		15.3	22.0	28.9	30.5	42.8	-9.0	-31.9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60	-16	-52	-1	-86	75	-	
	무역수지(억\$)	146	-132	-66	-3	-79	15	-34	
물가	생산자물가	1.4	8.4	5.1	9.0	11.3	8.0	4.7	
	소비자물가	2.5	4.6	3.8	4.8	5.1	4.5	3.7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

□ 금융 동향 : 금융시장 불안 재연

○ (해외 금융 시장) 미 달러화 강세 지속

- **금리**: 동유럽 금융기관들의 손실확대 전망에 따른 세계경기침체 심화 우려와 세계증시 급락으로 주중반 대폭 하락하였으나, 총 940억달러 규모의 미국채 입찰계획이 발표되면서 전주말 대비 소폭 하락에 그침 (국채 10년물 : 2.89→2.85%)
- **환율**: 엔화는 일본경기 침체 우려와 안전자산으로서의 미 달러화 수요 증가로 대폭 약세를 보였고, 유로화도 동유럽발 서유럽 금융위기 가능성이 고조되며 상당폭 약세 (\$/€ : 1.2862→1.2674, ¥/\$: 91.93→94.20)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채권값, 원화의 트리플 약세

- **주가**: 미국 실물 지표 악화 지속 및 동유럽발 금융위기 가능성 고조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전주말 대비 대폭 하락 (1,162.1→1,065.9)
- **금리**: 한은의 국고채 매입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국고채 발행 확대 부담 등의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대폭 상승 (국고채 3년 수익률 : 3.59→3.92%)
- **환율**: 미국 대형 상업은행 지급불능과 GM 파산 신청 가능성, 그리고 동유럽발 금융위기 등으로 달러화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전주말 대비 급등 (1,379.5→1,506.0)

○ (전망) 대외 불확실성 지속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7		2008				2009	
		3/4	4/4	1/4	2/4	3/4	4/4	2.13	2.20 ¹⁾
국내	거래소 주가	1,946.5	1,897.1	1,703.9	1,674.9	1,448.1	1,124.5	1,192.4	1,065.9
	국고채3년(%)	5.46	5.74	5.10	5.90	5.74	3.41	3.59	3.92
	원/달러	915.1	936.1	990.4	1,046.0	1,207.0	1,259.5	1,379.5	1,506.0
해외	DOW	13,896	13,265	12,263	11,350	10,850	8,776	7,850	7,465
	Nikkei	16,786	15,308	12,526	13,481	11,259	8,860	7,779	7,557
	미국채10년(%)	4.59	4.02	3.87	3.97	3.82	2.21	2.89	2.85
	일본채10년(%)	1.69	1.51	1.45	1.60	1.47	1.18	1.27	1.27
	달러/유로	1.4267	1.4593	1.5788	1.5848	1.4092	1.3972	1.2862	1.2674
	엔/달러	114.80	111.65	99.70	106.22	106.11	90.64	91.93	94.20
	두바이(\$/배럴)	76.64	89.06	97.66	136.65	90.60	34.66	44.36	40.10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2.19) 기준.